

제주 과잉생산 전력 해결 숨통 트이나

제주~완도 잇는 제3해저송전선로 인·허가 막바지 단계 삼양변환소 착공 앞뒀… 공유수면 점·사용 절차 남아 가동 시 남아도는 도내 신재생에너지 육지로 전송 가능

6년을 끌어온 제주~완도 #3HVDC 해저송전선로 건설사업(이하 제3해저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마지막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제3해저송전선로는 제1·2해저송전선로와 달리 애초부터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보낼 수 있게 설계돼, 전력 생산 과잉으로 골머리를 앓는 제주지역의 전력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3200억원을 들여 제주와 완도 바닷속 90km에 이르는 해저송전선로(200MW급)를 건설하는 것이다.

제3해저송전선로가 가동되면 제주도가 육지에서 공급 받는 전력 규모는 최대 550MW까지 늘어난다. 제주도가 이미 운영하고 제1·2해저송전선로의 전력 용량은 각각 150MW와 200MW다.

제3해저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크게 세갈래로 나뉜다. 한전은 고압의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또 교류 전력을 다시 직류 전력으로 바꾸는 변환소를 제주도 삼양동과 완도군에 각각 짓고, 두 지역 해저에 전력이 오가는 90km짜리 케이블을 연결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됐지만 완도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완도군 내 최초 후보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이 변환소 유치에 동의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제주시 삼양동변환소(#3 HVDC 동제주변환소)는 지난달 건축 허가가 이뤄져 착공을 앞두고 있다. #3 HVDC 동제주변환소는 제주시 삼양동 일원 4만8000여㎡ 부지에 지어질 예정이다. 완도변환소 건설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미 마을 주민들이 유치에 동의한 만큼 조만간 건축 허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전 측은 밝혔다.

해저케이블 건설도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다. 한전 측은 해저케이블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지난 7월 제주시에 신청했다. 한전 측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만 끝나면 모든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제3해저 송전선로가 생기면 제주 지역에 남아도는 신재생에너지를 육지에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제주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수요보다 많아 발전기를 강제 중단하는 출력제한이 반복되고 있다. 전력이 과잉 공급되면 전력계통에 과부하가 걸려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1·2송전선로는 육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제주로 보내는 용도로만 쓰였지만 제3해저송전선로는 애초부터 양방향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도 관계자는 “올해 4월 신기술을 접목해 제1송전선로로 제주지역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역전송을 처음 성공했지만(역전송) 안전성 측면에서는 애초부터 양방향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3해저송전선로가 더 우수하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강창일 “한일관계 변화 당분간 어려워”

국회 외통위 국감 화상 참석 “기시다 내각 개선 노력할 것”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한일 간 쟁점 현안 중 하나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강창일(사진) 주일 한국대사는 6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새롭게 출범했지만 당분간 한일관계에 급격한 변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대사는 이날 오전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기시다 총리는 외무부 대신을 오랜 기간 역임한 바 있고, 외교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한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열린 입장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강 대사는 “급격한 변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우리 정부는 신내각과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방출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일본 정부가 방출 결정을 철회하도록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강 대사가 지난 1월 부임 이후 일본 외무상과 총리를 만나지 못한 점 등을 거론하며 대사로서의 자질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강 대사는 “한일 갈등은 구조적 문제로 한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총리와는 일정을 조율 중이고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부미헌기자 bu8385@ihalla.com

위성곤 “근해 연승어선 바람막이 설치 가능”

표준어선형 기준 개정 추진



적용이 되는데다, 허가처분 건수가 480건으로 허가 정수 456건 대비 24건의 감척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바람막이

이르면 내년부터 조업중 안전확보를 위한 근해 연승어선의 바람막이 설치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사진)은 6일 “해양수산부가 표준어선형 기준에서 감척조건을 삭제하는 표준어선형 기준 개정을 추진, 안전설비인 바람막이 설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표준어선형 제도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TAC(총허용어획량) 및 배의 수를 줄이는 감척사업 등 수산자원 관리 정책 이행 시 바람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근해 연승어선이 주로 잡는 갈치어종의 경우 현재 TAC 시험사업 중으로 2022년 7월야야 정식

이 설치 가능한 고시가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되지 않았다.

위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청, 근해연승어업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하고 해수부를 설득해왔다.

위 의원은 “바람막이는 안전설비임에도 불구하고 감척사업을 전제로 규격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도민들의 삶이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부미헌기자



정의당은 결선 투표로... 손 맞잡고 포즈 취하는 심상정과 이정미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당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결과 발표 및 보고대회에서 여영국 대표와 결선 투표에 진출한 심상정, 이정미 후보 등이 함께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정의당은 경선 결과 과반 득표를 넘은 후보가 없어 오는 12일 심상정, 이정미 후보의 결선 투표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왼쪽부터 배진교 원내대표, 심상정 후보, 여영국 대표, 이정미 후보,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대표 부친 제주땅 “농지법 위반” 배달업 종사자 안전 장비 지원 추진

서귀포시, 처분 의무 부과

서귀포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지난 5일자로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2023㎡ 규모의 밭이다. 이 대표의 부친은 2004년 1월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이후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토지 매입 5년 후인 2009년 한국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따라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농지 취득자가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을 때 내릴 수 있는 명령으로 이 경우 1년 이내 농지를 팔거나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서귀포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강성민 의원 개정 조례 발의

배달업에 종사하는 제주지역 '이동노동자'에게 안전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이원 지원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6일 발의했다.

개정 조례에는 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배달 종사자에게 헬멧 등 안전

장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 기반 비대면 소비활동이 증가하면서 택배 및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헬멧 등 보호장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한다면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혐오표현 방지 연구 발표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은 오는 8일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입법 연구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이 증가하는 상황에

서, 입법연구를 통해 혐오표현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로 인한 피해방지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백기 박사(전 평화인권연구소장)의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입법 연구’ 주제 발표와 고현수 의원과 권혁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 오임수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양희주 제주여민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이상민기자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 2021년 학술세미나

근대 제주불교 역사 그리고 그 진실을 찾다 I

사단법인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근대 제주불교 역사 그리고 그 진실을 찾다' 주제로 2021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근대 제주불교 역사의 진실을 찾는 첫 번째 여정에 불자들과 학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일 시 | 2021년 10월 16일(토) 13:30~ 17:00
장 소 | 호텔 휘슬락 제주 2층 세미나장 (제주시 서부두 2길 26)
연락처 | 010-9185-1004

※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참석 희망자는 미리 연락 바랍니다.

사단법인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

全州李氏 桂城君派 濟州入島祖 時享祭 奉行 案内

전주이씨 계성군파 제주임도조(팽형조 및 득춘조)를 기리는 2021년도 시향제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으나, 정부의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종문의 정을 나누는 정겨운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 일 자 : 2021년 10월 9일 (토요일)

관 명	司馬公 彭馨祖(팽형조)	靖社功臣 得春祖(득춘조)
시 간	11시	10시
장 소	다호 묘역	덕지담 묘역
초헌관	詰源 (財務副會長, 10孝林派)	京成 (總務副會長, 8承林派)
아헌관	丞倫 (理事, 6繼林派)	厚成 (典禮理事, 8承林派)
중헌관	尙俊 (監事, 1逢林派)	東旭 (9太林派 青年會長)
대축관	尙奉 (典禮副會長, 7盛林派)	尙奉 (典禮副會長, 7盛林派)

단, 우천시는 계성회관에서 봉행하며, 오찬은 제공할 수 없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회관사무실 (064)724-0102, 사무국장 (010)6606-3779

全州李氏桂城君派濟州特別自治道宗親會
會長 李哲憲